

3년 비공개



의안번호	제 248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10. 14. (제 18 차)

의
결
사
항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손 병 두
제출 연월일	2020. 10. 14.

1. 의결주문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의 제19기('17.1.1.~'17.12.31.)부터 제20기 3분기('18.1.1. ~'18.9.30.)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의 제19기('17.1.1.~'17.12.31.)부터 제20기 3분기('18.1.1. ~'18.9.30.)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여·선급금 등 허위(과대)계상 (연결 : '17년 22,700백만원, '18년 1분기 25,049백만원, 반기 및 3분기 5,552백만원 · 별도 : '17년 20,715백만원, '18년 1분기 23,065백만원, 반기 및 3분기 24,465백만원)○ 관계기업투자주식 등 과대계상 (연결 : '17년 ~ '18년 1분기 2,402백만원, 반기~ 3분기 2,379백만원 · 별도 : '17년 ~ '18년 3분기 3,499백만원)○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조치 내용 *1,*2, *3,*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 340.3백만원○ 과태료 60백만원○ 감사인지정 3년○ 검찰고발 (회사, 前 업무집행지시자 ○○○, ○○○, 前 대표이사 ○○○, 前 사내이사 ○○○, ○○○)

※ 前 업무집행지시자(회장) 000, 前 업무집행지시자(고문) 000, 前 대표이사 000, 前 사내이사 000, 前 사내이사 000 및 前 감사 000은 담당 임원 해임권고 대상이나, '19.11.20. 퇴직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로 갈음 [퇴직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운영방안('13.8.21. 증선위 보고)]

*1 위반행위 발생 당시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과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이 동일하여 위반행위 발생 당시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위반행위 발생 당시 양정기준):

○ 대여금 등 허위(과대)계상: 고의

-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여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누락하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의'로 판단[舊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1.가.1),3)]

○ 관계기업투자주식 등 과대계상: 중과실

-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2.나.3)]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위반행위 발생 당시 양정기준) : 1단계 가중

○ 기본조치의 가중 : 1단계 가중

- 회사 경영진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코스닥상장사 2사((주)이엠앤아이, 00000000)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2.가.1)]

○ 기본조치의 감경 : 해당사항 없음

*4 검찰 고발 관련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회사 및 前 경영진 5인을 검찰 고발 조치함

① 000 前 업무집행지시자(회장) : 비등기임원이나,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친인척을 회사 경영진에 선임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

- 지적사항 '가'와 관련하여, 타상장사(0000000) 인수를 결정하고 회사 경영진(000, 000, 000)에게 회사 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이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

- ② 000 前 업무집행지시자(고문) : 비등기임원이나,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면서 000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자금거래를 관장하는 역할을 담당
- 지적사항 ‘가’와 관련한 자금 거래를 회사 내부에서 지시하였으며, 일부 거래는 직접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
- ③ 000 前 대표이사 : 000와 함께 000의 지시를 받아 내부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수행
- 등기된 대표이사로 제19기 ~ 제20기 3분기 재무제표에 서명하는 등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이 있음
- ④ 000 前 사내이사(재무담당임원) : 제19기에는 비등기임원, 제20기 1분기 ~ 3분기까지는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및 페이퍼컴퍼니의 결산 업무를 총괄
- 지적사항 ‘가’와 관련한 회계처리 위반을 주도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 ⑤ 000 前 사내이사 : 비상근임원이나, ‘000’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의 사무, 계좌관리,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000의 지시를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
- 지적사항 ‘가’와 관련하여 000과 함께 종속법인(000000000) 결산 업무를 지시하고, 페이퍼컴퍼니의 법인인감을 관리하면서 허위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5 000 前 감사에 대한 조치수준(위반행위 발생 당시 양정기준) : 종과실 1단계

- 동기판단 : 회계처리 위반이 최고경영진의 자금유용에 기인하였고, 비상근 감사로서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없어 고의로 보기는 어려우나,
 - '17.11월부터 00000000 사외이사를 겸임하고 있었음에도 회사와 00000000 간 거래의 자금 거래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회사 재무제표에 거래의 대여·선급금이 계상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 직무를 중대하게 소홀히 하여 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과실’로 판단
- 중요도 : 감독책임자인 점을 감안하여 회사의 중요도(가중치 최대)보다 1단계 낮은 수준인 1 단계로 부과

※ 감리과정에서 경영진에 의한 횡령·배임 가능성이 확인되어 동 사항을 수사참고사항으로 검찰에 既송부(기획감리3팀-125, '19.9.10.)

나.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선급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7년 연결 : 22,700백만원 · 별도 : 20,715백만원) ○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7년 연결 : 2,402백만원 · 별도 : 3,499백만원)
조치 내용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회계법인(중과실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 지정제외점수 100점 ○ 공인회계사 OOO(중과실 I) [주책임자, 담당이사, 계정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정지건의 1년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낮아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를 적용

*2 동기판단(위반행위 발생 당시 양정기준) :

- 대여·선급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중과실
 -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2나.3]
-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중과실
 -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2나.3]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위반행위 발생 당시 양정기준)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제9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0.7.9.)

나. 관계법규(붙임1)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지1)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 000 000 00000 00, 0000 00 0000

☐ 000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의 前 업무집행지시자]

- 생년월일 : 0000년 0월 00일
- 주소 : 000 000 000 0000 00, 0000 00000

☐ 000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의 前 업무집행지시자]

- 생년월일 : 0000년 0월 0일
- 주소 : 000 000 000 000 00, 0000

☐ 000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의 前 대표이사]

- 생년월일 : 0000년 0월 0일
- 주소 : 000 000 000 000 0, 00 0000

☐ 000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의 前 사내이사]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 주소 : 000 000 000 000 000, 0000 0000

☐ 000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의 前 사내이사]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 주소 : 000 000 000 000 00-0, 0000

2. 조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에 대해 과징금 340,300,000원을 부과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에 대해 과태료 60,000,000원을 부과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은 2021회계연도부터 2023회계연도('21.1.1. ~ '23.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 퇴직자인 前 업무집행지시자 ○○○, ○○○, 前 대표이사 ○○○, 前 사내이사 ○○○, ○○○, 前 감사 ○○○의 위법사실을 통보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제21조, 舊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 및 前 업무집행지사자 ○○○, ○○○, 前 대표이사 ○○○, 前 사내이사 ○○○, ○○○을 검찰에 고발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이하 '회사')은 제19기('17.1.1. ~ '17.12.31.)부터 제20기 3분기('18.1.1. ~ '18.9.30.)까지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대여금 등 허위(과대)계상

(연결 : '17년 22,700백만원, '18년 1분기 25,049백만원, 반기 및 3분기 5,552백만원 · 별도 : '17년 20,715백만원, '18년 1분기 23,065백만원, 반기 및 3분기 24,465백만원)

- 회사는 제19기('17.1.1.~'17.12.31.)부터 제20기 3분기('18.1.1.~'18.9.30.)까지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경영진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 자산을 허위 계상하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지 아니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계연도별 회계처리 위반 지적사항 >>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적사항	제19기 ('17년)	제20기('18년)		
			1분기	반기	3분기
별도	대여금 허위(과대)계상	4,900	6,500	6,500	6,500
	종속기업투자주식 허위계상	15,815	15,815	15,815	15,815
	선급금 허위계상	-	750	2,150	2,150
	지적사항 합계	20,715	23,065	24,465	24,465
연결	대여금 허위(과대)계상	6,600	8,206	3,402	3,402
	선급금 허위계상	11,582	750	2,150	2,150
	선급금·부채 허위계상	4,518	-	-	-
	매도가능증권 허위계상	-	16,093	-	-
	지적사항 합계	22,700	25,049	5,552	5,552

○ 관계기업투자주식 등 과대계상

(연결 : '17년 ~ '18년 1분기 2,402백만원, '18년 반기~ 3분기 2,379백만원 · 별도 : '17년 ~ '18년 3분기 3,499백만원)

- 회사는 제19기('17.1.1.~'17.12.31.)부터 제20기 3분기('18.1.1.~'18.9.30.)까지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회수가능성 없는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선급금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계연도별 회계처리기준 위반내역 >>

(단위: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제19기 ('17년)	제20기('18년)		
			1분기	반기	3분기
별도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2,499	2,499	2,499	2,499
	선급금 과대계상	1,000	1,000	1,000	1,000
	지적사항 합계	3,499	3,499	3,499	3,499
연결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1,402	1,402	1,379	1,379
	선급금 과대계상	1,000	1,000	1,000	1,000
	지적사항 합계	2,402	2,402	2,379	2,379

○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 회사는 '18.5.18.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상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18년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대여·선급금 등을 허위 계상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작성한 계약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제164조, 제426조, 제429조 및 제4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제170조 및 제387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별표 제2호

-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44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舊「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및 제48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거짓의 사실이 기재·표시되어 있지 않은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 실적 등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및 제21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및 제56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별표 제2호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 회사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허위자료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59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함
-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함

(별지2)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OO회계법인(제19기 감사인)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 0000 000 00(000, 000000)

☐ 000(제19기 주책임자, 담당이사, 계정담당자)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 소 : 000 000 000 00 0000 000000

2. 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 OO회계법인은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17회계연도 감사보수액의 70%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하고,
-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의 2021회계연도부터 2023회계연도(‘21.1.1.~’23.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정제외점수 100점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000에게 직무정지 1년의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 공인회계사 000은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의 2021회계연도부터 2024 회계연도('21.1.1.~'24.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 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〇〇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주)이엠앤아이(舊 (주)케이제이프리텍)(이하 '회사')의 제19기 ('17.1.1.~ '17.12.31.)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함

○ 대여·선급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7년 연결 : 22,700백만원, 별도 : 20,715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19기('17.1.1.~'17.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가 자산성이 없는 대여·선급금,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였음에도, 회사가 제시한 증빙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7년 연결 : 2,402백만원, 별도 : 3,499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19기(’17.1.1.~’17.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가 회수가능성이 없는 관계기업투자주식 및 선급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관계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및 자산의 회수가능성 평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700

-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또한,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해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③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④ 경고 또는 주의, ⑤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등록취소,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붙임1)

관 계 법 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제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 ⑤ <생 략>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 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 5. <생략>

제20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5. 제10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③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제1항·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④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13. 12. 30.>
5. 제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⑤ 삭제 <2013. 12. 30.>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 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⑦ <생략>

[별표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제29조제3항 관련)

1.~6. <생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20. <생략>

제41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42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배회사 또는 감사인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8.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행한다.

③ <생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조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 등에 따라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생략>
 4.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및 조사업무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생략>
- ③ ~ ⑧ <생략>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생략>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 4. <생략>

② <생략>

③ 증선위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삭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 (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책임자에게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당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다음 각 호의 자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생 략>

제56조(고발등) ① 증선위는 감리결과 고의로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증선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정황으로 보아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등)

① ~ ② <생 략>

③ 삭제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② ~ ⑧ <생 략>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 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③ ~ ⑦ <생 략>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등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③ <생 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부칙 <제2019-13호, 2019.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 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제2호)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제25조의3(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25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조치자의 진술거부의사 표명·피조치자의 행방불명 등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제1호)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160조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4조 (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偽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6조 (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⑧ <생략>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 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5.28.>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4.12.30.>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삭제
-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 ④ <생략>

제4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2. <생략>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다. <생략>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마.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이하 생략>

제448조 (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 법 제1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 전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 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 경우 해당 서류(집합투자증권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 표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할 것. 이 경우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하여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생 략>

②~⑤ <생 략>

제168조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생 략>

② 법 제1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9조제7항에 따른 대표이사과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6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회사의 개요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 주주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9.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⑥ <생 략>

제170조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8조제2항제7호 중 부속명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②~④ <생략>

□ 舊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4.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4조(고발등)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 3. <생 략>

별표 제3호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1. ~ 4. <생 략>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 나. <생 략>

다.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10.4.26. 신설)

6. ~ 7. <생 략>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 3. <생 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별표 제2의2) 과태료 부과기준

부칙 <제2020-4호, 2020.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가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 회계감사기준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7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기준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 전문가적 의구심 >

- 12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00에 따라, 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과거 경험과 관계없이,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여야 한다.
- 13 그렇지 아니하다고 믿을 이유가 없는 한, 감사인은 회계기록이나 문서가 진실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 중 식별된 상황으로 인해 문서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내의 문구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믿는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4 감사인의 질문에 대하여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그 불일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 감사증거의 평가 >

- 36 감사인이 그 중요성과 관계없이 어떤 왜곡표시를 식별하였으며, 그 왜곡표시는 부정의 결과이거나 결과일 가능성이 있고, 경영진(특히 상위 경영진)이 관여되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면, 감사인은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평가 및 그러한 평가에 대응하였던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또한 이전에 입수한 증거의 신뢰성을 재고려할 때, 상황이나 조건들이 종업원, 경영진 또는 제3자가 관여된 공모의 가능성을 나타내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 37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부정의 결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때, 또는 재무제표가 부정의 결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감사에 미치는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기준 500. 감사증거

-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기준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7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 적정의견 -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

10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 감사의견 >

35 감사인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때, 법규에서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감사의견에 다음의 문구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문구는 서로 동등한 것으로 본다.

- (a) 재무제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 (b) 재무제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기획감리실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863